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6년 7월 7일(화)

문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 국장 김지혜(010-7290-4028),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홍보실장 황남순
(010-9347-8103),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우동희 (010-9205-2029)



한국진보연대 한총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취지

- 지난 2024년 10월 30일,公安수사본부는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하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총목 상임공동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친북동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저지 이후 2025년 4월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한 차례 형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 전부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은 채 매월 반복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사실상의 정치적 탄압입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무리한 수사의 즉각적인 종결과 출국금지 철회,公安탄압 관행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7일(화) 오전 11시30분,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 한국교회 인권센터 류승권 목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수사과 장기 출국금지는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오민애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조사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나 수사 진척 없이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며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뚜렷한 증거 없이 1년 넘게 이어지는 표적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정부가公安 통치 구태에서 벗어나 무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한총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13년부터 이어진 내사 끝에 내란 비상계엄 직전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형식적인 조사만 받은 채 13년째 수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한국진보연대 한총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公安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3. 개요

- 일시: 2026년 7월 7일(화) 오전11시30분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기자회견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청와대 탄원서 전달

발언

-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류순권목사

오늘 우리는 한국진보연대 한총목 상임 공동대표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유물인 공항 전국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 아래
범죄로 매도당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장기간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기관과 법무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와 명백한 혐의 입증도 없이 한총목
대표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한 사람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마땅한 근거도 없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출국금지는 수사의 보조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부당한 사법적 처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한 개인에 대한 단순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평화 통일 운동을 말살하고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오래된 공안 정치의 추악한 반복입니다.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며, 대화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는 결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연대해 왔습니다. 그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공안 탄압이 한 사람의
일상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목도해
왔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삶 전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 이들, 끝없는 수사와 재판에
매여 불안 속에 살아가는 가족과 동료들을 만나왔습니다. 공안 탄압은 개인의
삶을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두려움을 터뜨려 침묵을 강요합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을 의심하고 통제하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해야 할 일은 시민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기본권이 훼손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을 의심하고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정부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한총목 대표에 대한 부당하고 조작된 공안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법무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셋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시민사회와 평화통일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한 사람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경찰은 **2024년 10월** 한총목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 조사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출국금지 조치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 금지 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할 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무부에 무제한의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할 위험성이 있는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가 언제 끝날지 예정하거나 조사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수사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장기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것이 출국 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사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조사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의 진척이나 변화는 없이 당사자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생활 근거나 거주가 분명하고 압수수색과 필요한 증거 수집 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수사가 멈춰 있다면 출국 금지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김경민 상임대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하는 공안 당국의 막가파식 정치 탄압을 규탄하고, 한국 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 탄압을 중단시키고 출국 금지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30일**, 공안수사본부는 무려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요란한 국면 전환용 친북 동조 혐의를 들이밀었지만,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당국은 단 하나의 명백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년 4월** 대공분실에서 한 차례 조사를 집행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수사본부는 사건을 종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혐의를 붙잡은 채 그저 매월 반복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만 연장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완벽한 인권 침해이자 진보 진영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비겁한 정치탄압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공안 당국의 구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한 정의입니까?

공안 통치에 기댄 정권 시세는 결국 국민의 재앙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금의 공안 탄압 실태를 즉시하고 즉각 각성하십시오. 당장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두 힘을 합하여 이재명 정부와 또한 국가보안법 철회와 한충목 대표의 공안 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한국진보연대 한총목 상임공동대표

제 사건 번호가 아직은 법원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여한 사건번호가 경찰청 보안수사대 **2013-31** 이것이 제 사건 번호입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봤더니 **2013**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담당이라는 것이고 **2013**년에 인지 수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인지를 해서 **11**년 몇 개월 동안 내사를 해왔고 급기야 내란 비상 개헌을 한 달 앞두고 진보 연대와 우리 집에 엄청난 숫자의 대공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이 **20**시간 이상 진행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났을까요? TV조선에서 반국가세력이 활보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특히 그러하고, 한총목 대표는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다 라는 것으로 TV조선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압수수색과 사실상 거의 동시에 TV조선에서 발표한 것은 아마 그들의 치밀한 구상과 계획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비상계엄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비상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 총목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간첩으로 아마 발표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보연대는 그 간첩을 품고 있는 간첩단 조직으로 아마 공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저항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이나 지나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지극히 형식적인 두 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말미에 언제 또 부르시나요 물었더니 다 했습니다. 이제 더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8**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거죠. 이제 **13**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에는 출국금지령이 등기로 집에 배달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무수히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투쟁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그런 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1**년은 지켜보자 그리고 지방선거는 끝나고 나서 하자 국가안법 문제 간첩단 사건을 가지고 그 이전에 쟁점화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꺾꺾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 **1**년을 지나 국민 주권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투쟁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교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그 투쟁을 선포하는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 하나 개인이었다면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사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종교, 시민, 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올 곧게 설 수 있도록 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사진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류순권목사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자주통일평화연대 김경민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청와대 경청수석실에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탄원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에 앞선 2024년 10월 30일,公安수사본부는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하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총목 상임공동대표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활동과 친북동조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근거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강압적 수사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한국진보연대 간첩단 사건'이 조작·발표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국민의 힘으로 저지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18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형식적인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은 채 매월 반복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인권침해이자 사실상의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려면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결론 없이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하는 것은 정의와 법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내란이 국민의 저항으로 좌절되고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국진보연대와 한총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公安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한총목 대표에 대한 정치적公安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근거 없는 출국금지 연장을 중단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 수사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거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公安탄압의 관행을 청산하라.